



트럼프의 지독한 인종차별, 저항에 부딪히다

관련 기사 5, 6~7면

진영논리와
윤미향·정의연
변호론

8~10면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정부가 감염 확산
에 책임 있다

2, 3면

한국판 뉴딜 —
규제완화, 노동개혁,
저질 일자리 창출

3면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운동

6~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을
부추겨 정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5면

홍콩 항쟁
미국·유엔의
개입을 반기면
안 되는 이유

4면

노동자 저항
시작되는가?
보라매병원,
STX조선 등

12면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한 등교 개학일 뿐이다

김현옥 고등학교 교사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코로나 확산에 이어 쿠팡 물류센터와 학원가를 연결고리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6월 3일 '3차 등교 개학(고1·중2·초3~4)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등교 개학이 “생활 방역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자료만 봐도 감염 위험으로 등교가 연기된 학교가 전국 830곳에 달한다(수도권 627곳). 5월 27일 등교 대상 학생 중 9.6퍼센트(25만 7093명)가 등교하지 못했다. 이 중 5만 4190명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정학습’을 신청해 등교를 거부했다.

이태원 클럽과 연관돼 확진된 학원 강사에게 묶은 인천 초·중·고등학생 확진자가 2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 신도림중학교 1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원을 매개로 한 감염 전파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교육부는 5월 29일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에 한해 한 번에 등교할 수 있는 인원을 고등학교는 전체의 3분의 2 이하, 나머지는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고3 학생들은 대입 준비로 매일 등교해야 하는 처지이다.

등교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등교 재개를 반대하는 중·고등학생 400여명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는 “사람이 먼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치적으로 고3을 이용하는 것 같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은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등교 이후 학교는 전쟁터 같은

긴장감 속에 있다. 등교 전 건강자가 진단 시작, 교문 들어서는 학생들 발열 체크, 수업 시간마다 교실 환기, 화장실 밀집하지 않기 지도, 급식 전 발열 체크와 급식실 지도 등. 1명이라도 체온이 37.5℃가 넘으면 학교 전체가 비상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등교 개학으로 인한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3 등교 후인 5월 21일 한 보건교사가 올린 ‘등교 개학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라는 글에는 1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건교사도 있지만 다른 교사 인력들을 방역책임관 또는 부책임관으로 지정하라”며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맡기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 재확산 위험을 키우는 등교 개학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코로나19 상황으로 안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전면 제기됐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그동안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진보진영이 꾸준히 제기한 것인데, 이제는 안전 문제까지 결합돼 더 중요해졌다.

학령인구 감소를 맞아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증원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했다. 그러나 교원은 오히려 감축됐고 그 공백은 정원의 기간제 교사로 메꿔졌다.

‘OECD 교육지표 2019’를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17년 기준 한국 초등 23.1명, 중학교 27.4명이다(OECD 평균 21.2명, 22.9명). 그러나 이 통계로도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과밀학급이 아니더라도 학생 수가 1000 명이 넘는 학교에서는 2미터 거리두기가 아예 불가능하다.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는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5명 상한제’ 신설을 요구해 왔는데, 요즘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안전한 거리두기를 위해 15명으로 해야 한다는



5월 27일 등교 개학이 시작된 초등학교. 학생, 교사, 부모 모두 불안하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런 목소리는 외면한 채 등교개학을 강행하는 것은 아이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입시 일정 연기, 대학 입학자 격고사제·대학평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10퍼센트 수업일수 감축(유치원은 온라인 개학도 못한 상황이라 더 많은 수업일수 감축 필요)외엔 기존 교육과정, 평가 시스템을 여전히 고수한다. 여전히 입시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을 정상적인 정규 교육과정으로 대체해서 교육 불평등과 학습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진보교육연구소가 내놓은 온라인 수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51퍼센트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과 교육협동조합 ‘마인’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59.1퍼센트가 사교육(학원, 인터넷 강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등교 개학을 한 후 수행평가, 지필평가, 생활기록부를 위한 비교과 활동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다. 교사들은 감염 재확산으로 등교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에 등교 때 모든 평가와 비교과 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역감염 확산으로 등교를 연기하는 학교가 속출하면서 입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하반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전문가들이 예고하는 상황이지만, 수능과 입시 일정은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무기한 휴교하면서 대입시험과 중등자격검정시험 시행을 취소했다. 프랑스는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에서 지필평가를 없애고 내신평가와 구술시험만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걸어온 길을 보면 입시 일정 강행은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은 대선에서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서

열화 완화’를 약속했지만, ‘공정성’은 운하며 수능 절대평가 공약에서 후퇴하고 정시 비율을 40퍼센트 이상 확대했다. 그러나 정시 비율을 늘린다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사교육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외교·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자신의 임기 후인 2025년으로 미뤘다.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수업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면서 이후 고교학점제의 안착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원격수업이 안착되면 학교와 교육청·지방자치 단체가 연계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에 에듀테크를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언택트(비대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이 뉴딜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그러나 전교조가 5월 27일에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온라인 수업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57.7퍼센트나 됐고, 고3 온라인 학습 만족도는 23.9퍼센트에 그쳤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대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학습효과가 높다. 입시와 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온라인 학습을 학습 지원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그동안 대학입학자격고사제, 대학평준화를 주장해 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교육의 모순이 수면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이 과제를 중장기로드맵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당장 이를 실현하려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 관련 기사 3면

흑인 살해 사건, 사드 장비 추가 배치

주한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은 위선적인 ‘핑크워싱’

양효영

6월 1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광화문 대사관 건물에 걸었다. 2017년부터 미국대사관은 6월에 무지개 깃발을 게양해 왔다.

미국대사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만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기념하고자 레인보우 배너를 대사관 건물에 걸었습니다” 하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 게양은 미국 지배계급이 세계 곳곳에서 저지른 악행을 가리려는 전형적인 ‘핑크워싱’이다. 성소수자들의 친구인 양행세해서 인종차별, 제국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을 희석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지금 미국 정부가 자국과 한국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무지개 깃발 게양의 위선적인 본질이 더 뚜렷이 드러난다.

얼마 전, 비무장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8분 동안 경찰관에게 목이 짓눌려서 사망했다. 이 살해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흑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고,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고 외치는 시위대가 백악관을 습격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6~7면)

인종차별을 선동해 온 트럼프는 이번 흑인 시위에 더한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위대에 최루탄을 쏘고 군대 투입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성주 소성리에는 미군의 사드 장비가 추가로 반입됐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강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 4000여 명을 배치해 반대 주민들을 제압했다.

(미국 정부의 일부인) 미국대사관이 대체 “자유와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

희석 효과

그간 미국대사관은 2014년부터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등 ‘핑크워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다. 2017년에는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성주에서 1시간 거리박에 안 되는 대구에서 열린 퀴어퍼

레이드에 버스를 차리고 참가했다.(성소수자 운동 일각의 미국 제국주의 우호적 태도·전략에 대한 비판은 본지 215호의 ‘무지개행동과 한국 성소수자 운동 주류의 우경화’를 참고하시오.)

지난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자유주의 언론들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퀴어퍼레이드 참가를 우호적으로 부각해 보도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고, 이에 항의하며 미국 대사관저를 ‘월담’한 학생들을 조롱했다.(유감스럽게도 〈경향〉은 올해도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 게양을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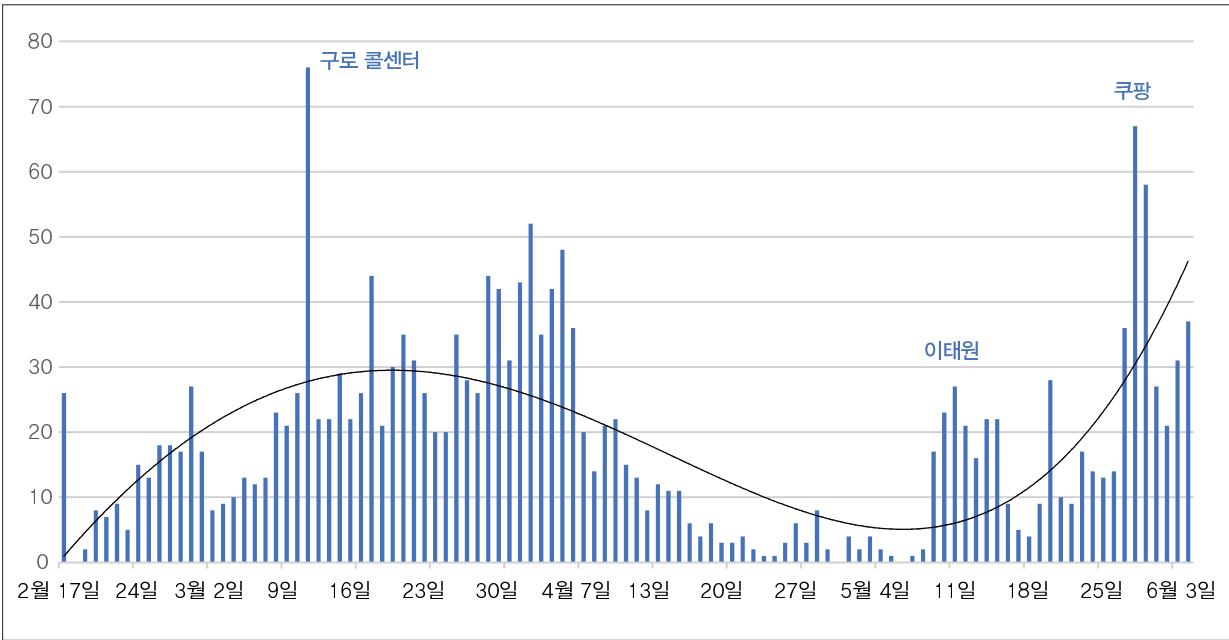
미국대사관은 성소수자 차별을 없

애는 것에 전혀 진지하지 않다. 정작 트럼프 정부는 자국 내 성소수자 인권 조차 깃발고 후퇴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트랜스젠더 살해범을 부실수사로 잡지 않는 경우도 많고, 경찰에게 살해 당하는 트랜스젠더들도 적잖다. 피해자 대부분은 하층계급 유색인종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의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활동가들은 몇 년째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에 경찰들이 참가하는 것에 항의해 왔다.

미국대사관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미국 내 차별받는 사람들과 세계의 대중이 함께 맞서 싸워야 할 적이다.



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 추이: 집단 감염들을 제외하더라도 확산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정부가 감염 확산에 책임 있다

장호중 의사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이 확인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5월 1일을 기점으로 감염이 늘어 일일 확진자 수만 보면 3월 말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가들은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확진자 중에 사망자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며 방역 협조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게 처음이 아니다. 2월 중순에도, 5월 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에도 문재인은 사실상 사태 종료를 암시하며 경제 활동 재개를 촉구한 바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과 3달 사이에 ‘끝났다’와 ‘아니었네?’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

사실 공장·사무실 등 작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정부 자신을 포함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이곳들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거나 이윤 논리에 안전 조처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이 경제 활동 재개를 내세워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를 중단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기업주들은 이윤 손실을 우려해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장과 사무실이 평소와 거의 다름없이 운영됐다. 하물며 정부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 활동을 하자는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고려할 기업주들이 있을까.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을 믿는다고 한 얘기는 순전히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수사였을 뿐이다.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등교를 강행했다.

일부 기업주들은 감염 확산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올까 봐 예방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결코 경쟁자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기업주들의 처분에 내맡기고 있다

이윤 잠식을 허용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심각한 경제 위기는 지배자들이 눈 앞의 이윤에 눈이 멀어 바로 뒤에 놓인 위험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쿠팡 물류센터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노동 강도가 높고 밀접 접촉 가능성이 큰 작업장은 상시적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노동 강도를 대폭 낮추고 노동 시간도 단축해야 한다. 이는 기업주들의 입장에서 이윤 감소를 뜻한다.

그런데 코로나 특수 덕분에 누리게 된 뜻밖의 매출 급증은 쿠팡 경영진으로 하여금 고삐를 당길 때라고 느끼게 했을 것이다. 그 결과 오히려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노동자들 사이의 거리도 더욱 좁혀졌다. 방역 수칙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이었을 뿐이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어도 다른 병이 유행했을 만큼 환경이 불결했다.

불안 키우는 전면 등교

이태원과 쿠팡 물류센터처럼 특정 지역에 한정된 감염 확산은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상대적으로 나온 편에 속한다. 위험 집단을 특정할 수 있고, 따라서 검사만 충분히 빠르게 이뤄지면 전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다르게, 숫자는 적어도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환자가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더 불안하다. 소규모 교회들뿐 아니라 각종 학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6월 9일 초·중등학교 모든 학년이 등교 수업을 한다.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했지만, 수백만 명이 위태로운 집단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천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0명 중 9명이 ‘현 단계에서 안전한 등교 수업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2면)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해당 업체나 학교 문을 닫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명백히 예상되는 위험을 예방하지 않고는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것이니 사실상 평범한 사람들을 코로나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소비를 늘려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권역별 지역 축제형 행사, 외식·여행 연계행사’까지 포함됐다. 정세균 총리는 “두려워도 일상으로의 발걸음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감염 확산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

이 맹목적인 이윤 우선주의가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낳도록 놔둘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고를 막고, 유급병가 등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자들을 압박하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며 위험한 축제 등을 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학교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한국판 뉴딜 — 규제완화, 노동개악, 저질 일자리 창출

강동훈

6월 1일 문재인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한국판 뉴딜’ 계획도 포함시켰다.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해 산업을 재편하고, 그중 31조 3000억 원을 2022년까지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6월 4일에는 국회에 3차 추경 예산안도 제출한다고 한다. 11조 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도 부족해, 단일 추경으로는 가장 많은 35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1퍼센트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2.4퍼센트에서 대폭 낮춘 것이지만, 국내외 다른 기관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여전히 높다. 3차 추경 등을 통해 성장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운운한 것과 달리, 한국판 뉴딜로 포장한 정책들 대부분이 이미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들을 재탕한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이라는 데이트 구축·개방·활용,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5G 국가망 확산, AI 인재 양성 등은 이미 추진 중이던 사업이다. 대기업들이 이윤 창출을 위해 원하는 원격 의료를 ‘비대면 의료’로 말만 바꿔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애초 6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던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다시 한 달 뒤인 7월로 미뤘고, 35조 원이 넘는 3차 추경 중 한국판 뉴딜에 사용되는 돈은 5조 1000억 원에 그친다. 게다가 한국판 뉴딜로 투자한다는 76조 원 중 2단계 45조 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후 계획이라 실제로 실행될지도 미지수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축 중 하나라는 그린 뉴딜 예산은 고작 1조 4000억 원만 배정됐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낡은 공공시설이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다. 탄소배출량을 언제까지 얼마나 줄이겠다는 계획도 없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도 없다. 오히려 해외 화력발전소 수주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파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포용 국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우며, 한

국형 뉴딜로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그러나 이 정책들도 사실상 ‘노인 일자리’와 비슷하게 ‘단시간 청년 IT’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주로 컴퓨터를 활용해 공공기관에서 수치 등 데이터를 입력하고, 온라인 홍보자료를 만드는 일이다. 병원이나 국립공원에서 방문객을 안내하거나, 불법 복제물을 모니터링하는 업무 등도 포함됐다. 실제 이런 일을 해 본 경험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형 놀알 불이기’라고 자조했다고 한다. 취약계층 일자리라는 전통시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청소하고 관리하거나, 산물 등 자연재해를 감시하는 일은 실제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와 같다.

민간 기업 일자리 지원도 청년(만 15~34세) 취업자 15만 명에게 최장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임금 단기 일자리 창출 효과밖에 못 낼 것이다.

저질 일자리

한편, 떠들썩하게 얘기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논의하겠다는 계획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심상정 의원 등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단호하게 이를 거부했다.

오히려 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연장을 위해 탄력근로제 강화와 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같은 노동개악안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제직자 고용유지협약은 임금 삭감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니 노동자들이 있는 일자리나 지키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판 뉴딜이라는 겉포장과 달리, 실효성 있는 방안도 별로 없고 특히 일자리·소득 감소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서민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기업주들을 위한 규제완화와 노동개악 방안들이 들어가고 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조차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 정책들을 ‘뉴딜’이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며 회의론을 폈다고 한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나 정의당 등 노동계 주요 조직의 지도자들은 문재인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예를 들어, 정의당의 이변 한국판 뉴딜 계획을 비판하면서도 “여야정 상설 협의체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뉴딜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을 언급하며 민주노총의 개혁주의적 지도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데 이용하려 할 뿐이고, 실제로는 ‘유연안정성’이나 친기업적 규제 완화, 임금 억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잘못된 기대를 품을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홍콩 항쟁

미국·유엔의 개입을 반기면 안 되는 이유

김영익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 문제는 미·중 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자 홍콩 보안법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이유로 홍콩에 부여해 온 경제적 특별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중국 제재 조치를 꺼내려 한다.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중국에 순응할지, 아니면 [미국을 따라] 가치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결할지”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한다.

제국주의 진영논리가 강화되면서, 홍콩 보안법 항의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조슈아 왕을 비롯해 일부 홍콩 야당 정치인들이 미국 정부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그 지지자들은 시위 때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홍콩 시위 참가자들이 트럼프보다는 미국 흑인 사망 항의 운동 참가자들에게 유대감을 더 느낀다는 홍콩 현지 보도를 보면, 기층 대중 다수가 앞서 언급한 야당 지도자의 생각에 아직 확고히 동조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홍콩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적의 적은 친구’라는 진영논리가 홍콩 항쟁 내에서 강화될 위험을 경계하며, 노동계급의 투쟁과 연대를 강조한다.

적의 적은 친구?

그런데 한국의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예컨대, 이런 주장이 있다.

“중국의 너무 거대한 힘과 살인적인 국가폭력 앞에 놓인 홍콩인으로서 미국과의 국제관계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홍콩 대중이 민주적 권리를 지키려면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다.

우선, 홍콩 대중이 원하는 민주주의와 미국 지배자들이 원하는 민주주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중국 공산당은 서구 사상과 민주주의, 서구 가치들의 파괴에 몰두하고 있다”며 미국 국가야말로 중국 ‘공산주의’에 맞선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한다. 그러나 ‘통치 과정에 대한 대중의 능동적 참여’를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으로 여기는 통념과는 달리, 미국 지배자들에게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아주 부차적이다. 오히려 ‘기업 활동의 자유’가 미국 지배자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2003년 민주주의를 선사하겠다고 이라크를 점령한 미국 부시 정부가 가장 열을 올린 일이 민영화와 각종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였던 까닭이다. 그 과정에서 불평등이 악화되고 이라크 민중의 삶이 파멸해져도 부시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라크 대중이 아니라 대중적 지지가 약한 소수 친미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몰아 쫓고, 점령을 유지하려고 이라크 대중을 종파



5월 24일 홍콩에서 열린 보안법 반대 시위

별로 분열시키려 애썼다. 미국의 이런 점령 정책이 결국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라는 괴물을 낳았다.

따라서 미국 지배자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기 나라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다. 미국 미네애플리스에서 한 흑인이 경찰에 목이 눌러 사망한 사건은 미국이 어떤 사회인지를 보여 줬다. 흑인 사망 항의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지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군대로 진압하겠다고 위협하고 시위대를 테러 집단으로 매도했다. 시진핑 정부가 홍콩 시위대의 일부 행동을 “사실상 테러”라고 하거나 군대 투입을 시사한 것과 똑같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옳게 말했듯이, 홍콩 보안법 항의 운동과 미국 흑인 사망 항의 운동 모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저항권 행사”다.

미국에게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문제는 언제나 대외 정책의 종속변수였다. 즉, 미국은 자신의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독재자들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아 버린다. 예컨대 미국은 자신의 중동 패권을 위협하는 이란에게는 신정 독재 체제라는 비난을 퍼붓고 제재를 가하고 정권 교체를 위협한다. 그러나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반한 친미 독재 왕정이 지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그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내 여러 독재 정권들을 떠받치고 그에 맞선 대중 저항을 짓밟는 데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보안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정부는 홍콩 보안법을 두고 길길이 날뛰지만, 정작 이와 유사한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해 온 한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중국 압박에 협력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패권의 명분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답시고 해외 곳곳에 개입한 오랜 역사를 갖

고 있다. 그러나 [서구식] 민주주의의 가치’는 미국 지배자들이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안에 묶어 두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이였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 유지와 해외 개입을 정당화하는 명분이였다.

반대로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짓밟아 버렸다. 예컨대, 1973년 미국은 칠레에서 선거로 선출된 사회주의자 대통령 아옌데의 정권을 전복한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를 지원했다. 당시 미국 국무 장관이었던 키신저는 소름끼치게 유명한 말을 했다. “그 문제는 칠레 유권자들끼리 결정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다.”

미국의 개입은 언제나 실제 민주주의의 향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동아시아로 들어온 미국은 파시즘을 물리친 ‘민주주의의 국가’를 표방했지만, 정작 대중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억누른 채 자국의

세력권을 확립하고 미국과 동일한 체제를 점령지에 이식하는 데 열중했다. 그 결과로, 남한·남베트남 등지에 친미 독재 정권이 잇달아 수립됐다.

이런 일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문제를 침공 명분 중 하나로 삼았다. 일부 진보 인사들조차 미국의 점령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지금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끔찍한 처지는 조금치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국은 소위 ‘불량국가’를 상대로 제재를 가해 왔는데, 이로 인해 진정 피해를 보는 쪽은 독재정권이 아니라 현지 민중이다. 예컨대 미국은 이란에 제재를 가하면서 이것이 이란 민중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는 이란 현지에서 물가상승 등을 자극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걸려 필수 의

약품을 적절하게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코 외부로부터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대중 스스로의 저항으로 도입되는 것임을 역사는 보여 준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제재와 군사 개입은 오히려 현지 대중의 저항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란 정부는 반정부 시위를 미국의 첩자나 친미 폭도들의 시위라고 비난할 수 있었고, 이를 시위를 진압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지금 시진핑 정부도 홍콩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홍콩인권민주법

미국이 지난해 시행한 홍콩인권민주법도 기본적으로 홍콩 문제를 이유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고안된 것이었다. 즉, 지난해 미국은 홍콩 항쟁을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5면으로 이어짐

유엔의 실체

홍콩 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6월 1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보안법 통과를 규탄하면서 이렇게 요구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

유엔이 국제 협력과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기구를 표방하므로 유엔 개입이 보안법 문제 해결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유엔에 대한 환상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때마침 미국과 영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문제 삼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매우 부적절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이 유엔을 통해 중

국에 공세를 퍼는 것을 뒷받침하는 꼴이니 말이다.

유엔은 탄생 과정에서 이력을 보건대, 평화와 진보를 위해 노동자들이 이용할 만한 기구가 못 된다.

유엔은 언제나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도구였다. 유엔은 제2차세계대전 후 승전국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고 만든 기구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유엔은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을 인정했고 이스라엘 국가를 승인했다.

유엔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고 횡포도 엄청나다. 그래서 유엔과 그 유관기관들은 흔히 강대국(특히 미국)이 벌인 군사 개입 앞에 무력하다. 대표적으로, 미군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유엔은 지켜보기만 했다. 또

는 미국의 전쟁을 유엔의 이름으로 정당화한 적도 있다(한국전쟁).

유엔 평화유지군도 문제가 많았다. 1992년 소말리아에 파병된 유엔 평화유지군은 내전을 부추기고 소말리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다가 결국 소말리아인들에 의해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지금 유엔은 보호책임(인도주의적 개입의 새 이름)을 강조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표방한다. 그러나 유엔의 보호책임 개념은 인권을 빌미로 한 서방의 제재와 군사 위협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결국 유엔은 나쁘거나 무능한 기구다. 따라서 유엔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명백히 공상이다.

문재인의 G7 참가는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할 것

이원웅

6월 1일 문재인이 트럼프의 G7 회담 초청에 응하겠다고 했다. 이를 전 트럼프는 이번 가을에 예정된 G7 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초청하겠다고 했다.(여기에 브라질이 추가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며 G7에 초청받은 것을 자축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옵서버 자격으로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며 그 의의를 추켜세웠다.

그러나 이는 미·중 갈등이 첨예해짐에 따라 거세지고 있는 ‘줄 세우기’ 압력에 응하는 것일 뿐이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화웨이 제재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트럼프는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배제한 경제 블록 구상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FPN)”나 화웨이 제재 등 각종 대(對)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 중국이 빠진 확대 G7 회담 제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는 다가오는 G7 회담이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G7 회담에 초청된 4개국 중 세 나라(인도, 한국,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동맹 국가들이다(나머지 한 곳은 러시아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호주를 거점으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경제적·군사적 패권을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한미동맹도 그 전략의 중요한 일부다.

물론, 한국 지배자들은 국제 제국주의 질서 내에서 자체의 이익에 따

라 행동한다. 문재인 정부가 G7 초청에 응한 것은 그것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줄 세우기 압박은 한국 지배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한다. 한국 지배자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줄타기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에 관해 문재인 정부가 극도로 말을 아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6월 2일 외교부가 뒤늦게 내놓은, “일국양제 하에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은 기껏해야 모호할 뿐이다. 물론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일국양제(홍콩 자치 보장)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하지만, 중국도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재에 동의하지 않고서도 홍콩 보안법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중국을 의식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판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이런 줄타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현재 세계 패권국이 여전히 미국인 이상 한국 지배자들은 한동안 중국을 의식하면서도 미국의 패권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정인이 한 미국 싱크탱크의 세미나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한 것은 시사적이다.

5월 29일 문재인 정부는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추가 반입했다. 국방부는 기존 요격 미사일을 똑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교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노후 장비를 정

기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은 ‘임시 배치’ 중인 사드의 정식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체계 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무엇보다도 이는 미국 국방부가 올해 초에 내놓은 사드 성능 개량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확대”하는 그 계획에 따라 성주에서 교체한 노후 장비를 개보수해 다른 지역에 배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에 맞선 ‘군사 연합’에 합류하라는 압력도 한국 정부에 넣고 있다. 5월 31일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서방의 가치를 지킬 좋은 파트너”들을 열거하며 “한국”도 그중 하나로 언급했다.

그에 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발표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중국에 상당히 침식”된 데에 대한 위기 의식이 반영된 이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규모 군사력 증강과 이를 위한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이 예산은 2021년 국방수권법(국방 예산법)에 반영될 것이라고 한다. 이 구상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은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단지 트럼프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미국 지배계급 모두의 합의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에 따라 미국 지배자들은 자국의 동맹국들에 더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등의 무기를 더 배치하려 할 것이다. 그만큼 중국을 둘러싼 인도·태평양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은 여기에 일조하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심각해지면 한반도 정세도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 지배자들이 겪는 딜레마도 더 깊어질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을 부추겨 정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미니애폴리스시(市)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 항쟁으로 불어나고 있다.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 빈민가들에서 위대한 항쟁이 일어났고, 1992년 로스앤젤레스 소요, 2014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도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어거스트 님츠는 미니애폴리스 전 경찰서장 토니 보우자가 다음과 같이 인정한 바를 인용했다. “미국에서 범죄 문제와 경찰 폭력 문제의 핵심은 모두 특권층과 빈민층을 나누고 암묵적으로 수용되는 계급 구조와 사회 전체가 외면하는 체계적 인종차별에 있다.”

그러나 분명 지금의 항쟁은 새로운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는 미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첫째, <ABC 뉴스>가 적나라하게 표현했듯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는 미국에서 흑인, 갈색 인종, 노동계급의 전염병이 됐다.” <ABC 뉴스>는 끔찍한 통계 수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라틴계는 백인보다 전염 가능성이 7배나 높았다. 조지아주(州) 코로나19 입원 환자 80퍼센트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뉴욕시에서 흑인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할 가능성이 백인보다 두 배 높다. 뉴욕주에서는 가장 최근에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생긴 지역 21곳 중 20곳이 흑인·라틴계 거주자가 주(州) 평균보다 많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이번 위기는 미국 민주주의의 계급적 야만성과 미국 민주주의가 늘상 용인하던 경제적 참극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

전염병 대유행이 노동계급에 준 공포와 고통이 장기화된 긴장을 격화시켰다.

《타임》지는 이렇게 보도했다. “미니애폴리스시 자료를 보면, 경찰들이 플로이드를 체포한 현장인 파우더혼 파크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하기로 손꼽히는 동네다.”

미니애폴리스에서 활동하는 노동운동가 한 명은 “경찰과 인종차별이 공중보건 문제”라고 했다. 플로이드의 죽음은 화약고에 불을 댕긴 격이었다.

트럼프

둘째, 도널드 트럼프가 있다. 트럼프는 불난 집에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였던 마이애미 전 경찰서장 윌터 헤들리가 1967년에 한 말을 인용해 트위터에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가 시작된다”고 썼다.

트럼프는 이렇게 이죽거렸다. 백악관 박 시위대가 저지선을 돌파해 백악관에 진입하면 “내 평생 본 것 중 가장 사나운 개들, 가장 무서운 무기로 맞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할 것이다. 최소한 그쯤은 돼야 사람들이 정말 심하게 다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시위를 극좌파 탓으로 돌리려고도 한다. 트럼프는 5월 31일에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미합중국은 ‘안티파(ANTIFA)’를 테러 단체로 지정할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헐박이다. ‘안티파’는 전투적 반(反)파시즘 활동가들의 느슨한 네트워크이니 말이다.

트럼프가 비이성적인 인종차별주의 쓰레기라서 이런 격앙된 발언을 한다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 물론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 쓰레기가 맞다. 그러나 트럼프는 교활하다.

경제 상황이 비교적 좋은 것에 기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트럼프의 계획은 전염병 대유행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동 제한령을 해제하려 단달인 것이다. 수많은 목숨을 더 대가로 치르더라도 말이다.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 경제 상황은 암울하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제이 파월은 경기 회복이 시작돼도 “생산성 증가 수준이 낮고 소득이 정체하는 시기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코로나19 대처에 처참하게 실패한 것 때문에 65세 이상 유권자 상당수가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지지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 바이든은 여권조사에서 트럼프를 10퍼센트포인트나 앞서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1968년 대선 때 리처드 닉슨이 처음 성공적으로 써먹은 과거 공화당의 ‘남부 전략’을 자기 식으로 펼쳐려 한다.

당시 닉슨은 ‘블랙 파워’ 운동이 성장하고 마틴 루터 킹 암살에 항의하는 운동이 일어나자 인종차별적 백인들의 공포를 자극해 대선에서 승리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인종차별적 경찰과 주방위군이 미쳐 날뛰어도 된다는 청신호를 켜는 것이다. 트럼프는 인종적 양극화를 부추겨 대통령 자리를 부지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07호 / 번역 김준호

4면에서 이어짐

그래서 홍콩인권민주법의 주된 내용은 미국이 부여해 온 홍콩의 특별 지위를 매년 인증하기, 그리고 홍콩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료 제재하기 등이었다.

일부 홍콩 야당 지도자들은 미국 의회의 홍콩인권민주법 제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는 이를 보안법 제정의 근거로 삼았고, 홍콩 대중과 중국 본토 대중 사이를 이간질하는 데 이용할 수 있었다.

홍콩 항쟁과 그 연대 운동이 미국의 개입을 환영하는 것은 홍콩 항쟁을 자주적인 대중 운동이 아닌 것으로 뒤돌아 버리거나 마비시켜, 홍콩 대중이 진정한 바람을 성취하는 것을 요원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은 몇몇 나라들에서 반정부 운동을 친미적 방향으로 뒤틀어 운동의

최종 결과물을 애초 대중이 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표적으로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 기존의 부패한 권력자는 물러났으나, 미국의 후원을 받는 다른 부패한 특권층 인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우크라이나 대중은 민주주의나 사회·경제적 조건 면에서 진정한 성취를 얻지 못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경쟁 국가들에서 벌어질지라도, 진정한 대중 항쟁, 특히 노동계급의 요구와 진출이 두드러지는 저항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은 1980~1981년 폴란드 연대노조 운동을 지지하지 않았다. 1989년 중국 공산당이 톈안먼 항쟁을 진압하자 이를 내심 환영했다.

홍콩 항쟁 세력들이 세계 2위 강대

국 지배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해답은 트럼프에게서 찾을 수 없다. 홍콩 항쟁에 대한 국제 연대가 중요하나, 그 연대의 대상은 트럼프가 아니라 흑인 사망 사건에 분노해 거리로 나온 미국의 노동자와 청년들과 이를 지지하는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일 것이다.

해답을 노동계급에게서 찾아야 한다. 노동계급의 사회·경제적 요구들을 제시하고 노동자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본토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시진핑 정부가 가장 염려하는 시나리오는 홍콩의 저항과 본토 노동계급의 저항이 결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토의 거대한 노동계급이야말로 홍콩 항쟁 세력들이 손을 내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친구다.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미네아폴리스 경찰을 규탄하며 시작된 항의 행동이 미국을 휩쓸고 있다.

5월 30일 시위대가 백악관 코앞까지 들이닥치자 트럼프는 지하 병커로 도망쳤다. 미국 대통령이 병커로 피신한 것은 2001년 9·11 공격을 받은 이후 처음이며<뉴욕 타임스>). 분노한 시위대가 백악관 진입을 시도한 것도 184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히스토리 채널>.

비밀경호국 대원들이 시위대를 저지하려 최루액을 난사하자 격분한 시위 참가자 한 명은 이렇게 소리쳤다. “네놈들 죄다 그 색이빠진 경찰 놈플로이드를 살해한 데릭 쇼빈한테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

백악관 앞 대치 사흘째인 5월 31일 아침, 트럼프가 교회에 예배하러 걸어가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경찰이 시위대를 침략했다. 시위대는 밤이 되자 반격에 나서, 워싱턴 DC 시내 곳곳에 불을 지르며 소요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 한 명은 불길에 휩싸인 워싱턴 DC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이렇게 썼다. “제국이 불타고 있다.”

6월 2일 현재(한국 시각) 워싱턴 DC뿐 아니라 뉴욕·디트로이트·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시카고·시애틀 등 미국 200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정의 없이는 평화 없다”고 외치며 행진했다.

경찰의 흑인 살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흑인 대통령 Barack Obama 시절에도 계속 있었다. 흑인은 백인보다 인구 대비로 두 배나 더 많이 경찰에게 살해당하며 그 수치는 특히 청년층에서 더 높다. 20~24세 흑인 청년 중 1.6퍼센트가 경찰에 살해당해 25세를 맞이하지 못하는데 이는 백인보다 몇 배나 높은 수치다.

경제적 격차도 심각하다. 65세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흑인의 실업률이 가장 높다. 특히 16~24세 층에서는 백인의 두 배가 넘는다. 흑인의 가구당 실질 중위소득은 4만 1361달러로 백인(7만 642달러)보다 한참 낮고 연방정부의 빈곤선 기준(3만 680달러)보다 약간 높은 뿐이다. 흑인 22퍼센트가 빈곤층이다.

이런데 플로이드가 살해당한 미네소타 주는 개종 심한 축이다. 인종 간 실업률 격차는 미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높고 소득 불평등도 열세 번째로 심각하다. 유색 인종을 상대로 한 경찰의 가혹 행위가 빈발했다. 플로이드 살해 주범으로 기소된 데릭 쇼빈만 해도 최소 12건의 가혹 행위 에 연루했다. 이전에 쇼빈에 살해당한 웨인 레이에스는 쇼빈과 경찰들의 총알을 16발이나 맞았다(총 42발을 쏘다).



사진 출처: AP, 로이터/게티이미지

5월 30일 일류기 시위

충점된 위기

코로나19는 경제 위기와 인종차별에서 비롯한 고통을 더욱 증폭시켰다.(관련 기사 5면)

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10만 명당 54.6명)이 모든 인종을 통틀어 가장 높고, 백인(22.7명)·아시아인(24.3명)·라틴계(24.9명)의 두 배를 넘는다. 소득 하락 폭도 다른 인종들보다 흑인이 더 크다.

이런 참혹상의 근저에는 계급 격차가 짙게 드리워 있다. <ABC 뉴스>는 “미국에서 코로나19는 흑인, 갈색 인종, 노동계급의 전염병”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10만 명당 최대 612명), 맨해튼 같은 부촌에서는 그 비율이 0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흑인뿐 아니라 라틴계·백인 등 인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항의 운동에 동참했다. 시위대는 플로이드뿐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경찰에 살해된 흑인·라틴계 희생자들도 함께 기렸고 국가의 빈민 천대에 항의했다.

노동자들도 동참했다. 통합교노동동조합(ATU) 미네아폴리스 지부와 뉴욕 지부는 경찰 병력 수송과 연행자 호송을 거부했다. 미네아폴리스 지부에서 이 결의를 주도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운송 노동자이자 노동조합원으로서 저는 우리 계급 사람들과 급진적 청년들을 감옥으로 실어나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하나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입니다.”

체제의 위기로 고통에 시달리기로는 마찬가지로인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도 연대 행동이 벌어졌다. 5월 30~31일에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캐나다 토론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등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 1만 명이 행진했다.

격화

지난 주말을 지나며 미국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는 운동 초부터 주지사와 사법 당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고, 6월 1일에는 이 운동을 “테러”로 규정하고 연방군을 투입해 진압하겠다는 강경책(폭동진압법)을 내놓았다. 연방군이 미국 본토에 투입된 것은 1992년 LA 소요 사태 이후 처음이다.

미국 민주당도 처음에는 플로이드 사망에 유감을 표했지만 시위가 확산되자 “폭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은 일부러 유리창이 깨진 가게를 골라 방문해 사진을 찍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시·주정부들이 잇달아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시위를 공격했다. 15개 도시에서 주(州)방위군 투입을 요청해, 약 5000명이 각지로 파견됐다. 주방위군은 동네를 뒤 잡듯 뒤지고 가정집을 공격해 시위 참가자를 색출했다.

그러나 항쟁은 계속되고 있다. 곳곳에서 시위대가 야간 통행금지를 강제하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소요도 계속 확산됐다. 텍사스주 휴스턴 시위에 참가한 테너 헌돈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시위에 나왔습니다. … [저뿐 아니라] 압도 다수가 경찰을 두려워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변화를 이뤄 내려면 싸워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운동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김준호



누가 “폭도”인가?

트럼프는 시위대를 “폭도”라고 비난하며 “야발이 시작되면 발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위가 “급진좌파”, “안티파”의 소행이라고 비난했다.

기세가 오른 경찰은 곳곳에서 시위대를 공격했다. 한편에서는 정복 경찰이 시위대 옆에서 (항의 운동의 상징적 제스처인) 무릎을 꿇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바로 같은 대열에서 시위 진압 경찰이 최루액과 고무탄을 쏘며 시위를 진압했다.

미국 전체에서 최소 두 명이 경찰진압 과정에 사망했다. 미네아폴리스에서는 경찰이 주먹을 머리 위로 치켜든 흑인 청년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에 최루액을 뿌렸고, 기자 린다 티라도가 경찰이 쏜 고무탄을 맞고 한쪽 눈을 실명했다. 켄터키주 루이지애나에서는 최소 7명이 시위 도중에 총에 맞았다.(경찰은 자신들이 쏜 게 아니라고 발뽀했다.)

헌돈은 휴스턴 현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경찰은 행진 대열이 방향을 틀 때마다 막아섰어요. 경찰은 저지선을 넘으려는 어린 여자를 바닥에 팽개쳤고, 말을 타고 있다가도 때려요.”

“하지만 우리가 경찰보다 수천 명은 더 많았어요. 경찰은 중무장했지만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자 손을 못 썼어요.”

폭동

이런 폭동(소요)은 무차별적 폭력 행위가 아니다. 사람들이 천대에 맞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폭동도 그중 하나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1929~1968)의 유명한 경구처럼 “폭동은 외면당하던 사람들의 언어다.”

이번에도 많은 경우 경찰의 폭력 진압 시도에 맞서 시위대가 방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폭동에 불이 붙었다.

폭동이 맨 처음 시작된 미네아폴리스에서 사람들은 경찰서를 겨냥해 폭력을 휘둘렀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최초 타격 대상은 대개 경찰서였다. 그중 다수는 가혹 행위 전력이 있는 경찰의 근무지였다.

경찰서에서 시작된 반화와 “야발”은 이후 상징으로도 변했다. 주류 언론은 이를 부각해 비난하지만, 상징에서 식량과 (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가져간 사람들은 대개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제 위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고,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기아에 시달려 왔다.

노동자·빈민의 등골을 뻗어 이 운을 쌓는 은행과 대기업의 지사에 불을 지른 경우도 있었다.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흑인 폭동은 깊은 분노의 폭발이었다. 그런 분노는 압도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천



인종차별적 미국 경찰은 일상적으로 흑인들을 위협해 왔다.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모습

대와 착취에 시달리는 사회, 흑인들의 목숨을 매일같이 위협하는 인종 차별적 경찰이 수호하는 체제를 겨냥했다.(관련 기사 본지 133호 ‘계급적 분노가 들끓었던 1992년 LA’)

물론 폭동은 대체로 투쟁 방항에 대한 지도(정치)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며, 노동자들의 조직적·집단적 투쟁과 달리 내부에 집단적 민주주의나 규율이 없기 마련이다. 저항 운동의 투사들은 지배자들의 폭력 비난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폭동을 노동계급의 집단적 행동과 연결시켜 폭발적 분노의 대상인 이 체제를 진정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비난한다고 다 운동의 친구는 아니다

이번 운동으로 그간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하며 홍콩 항쟁의 친구인 척하는 미국 정부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받고 기소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미국이 경쟁국들과 다른 점”이라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말로도 이를 가릴 수는 없다. 미네아폴리스 당국은 시위와 소요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법인 네 명 중 한 명을 (계획적이든 충동적이든) 살해 의도가 없었음을 전제하고 3급 살인과 과실치사로 기소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미국 지배자들 일각에서는 트럼프국의 강경 진압 입장이 세계 최강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에 흠을 낼까 봐 우려한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이렇게 지적했다. “시위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도적 반대 여론은 트럼프 임기 중에 미국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 줬다. 베트남 전쟁과 흑인 평등권 운동 시대에 미국 정부가 남부 주들에서 흑인 권리 운동을 강경 진압해 국제주의로 명비난이 쏟아졌던 것을 연상케 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와 미국을 비난한다고 해서 모두가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5월 3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트위터 게시글을 리트윗하며 “모든 목숨이 소중하다. 중국은 아프리카계 친구들을 단호히 지지한다” 하고 적었다.

그러나 중국도 흑인을 천대하기는 마찬가지다. 4월 광저우 지방 정부는 건물주들과 공모해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이주인 수백 명의 집을 빼앗고 거리로 내쫓았다.(광저우는 아시아 전체에서 아프리카계 이주인이 가장 많은 도시다.) 경찰의 플로이드 살해에 유감을 표한 짐바브웨·케냐 정부에 중국이 힘을 실어준 것은, 중국이 인종차별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중국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위해서였다.(관련 기사 본지 260호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과 제국주의 간 쟁탈전’)

무엇보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 항쟁을 “사실상 테러”라고 공격하는 시진핑 정부가, 흑인들의 저항을 테러로 규정한 트럼프와 무엇이 다른가?(관련 기사 4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항의 운동과 국가의 총돌이 격화되자,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민주당 실세들에서 나왔다.

6월 3일(한국 시각) 전 대통령 Barack Obama는 “폭력을 용납하거나 변호하거나 동참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를 개혁할 후보(바이든)를 당선시킬 투표를 조직하자”고 주장했다. 흑인인 애클랜드 시장 케야바바티스도 시위를 “혼돈”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을 바꾸고 싶으면 투표를 하라”고 했다.(바티스는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주요 정치인 중 하나다.)

소위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주장에 동조했다. 미국 민주사회당(DSA)과 연계가 깊은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일한 오마 하원의원도, 경찰과 충돌하는 시위대는 “흑인 생명 보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유감스럽게도 DSA는 이에 관해 아무 비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역사 속에서 거듭 대중 운동을 단속하고 변화 요원을 자당 투표 부대로 이용해 왔다. 바로 그 과정에서 1950~1960년대 흑인 평등권 운동이 길을 잃고 민주당에 종속됐다.(관련 기사 본지 315호 ‘미국 민주당은 어떻게 진보적 평등을 좌절시켜 왔는가’) 하지만 그 후 반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인종차별은 미국 흑인들을 짓누르고 있다. 흑인 대통령이 당선해도 마찬가지였다.(오른쪽 기사를 보시오)

19세기 노예제 폐지론자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말처럼, “저항하지 않으면 권력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다.” 흔히 비폭력·평화적 운동으로 알려진 흑인 평등권 운동도 국가와 인종차별 우파의 폭력 탄압에 직면해 반란과 항쟁을 벌이며 전진했다. 1964~1968년에 미국 곳곳에서 시위, 소요, 비강연 파업이 벌어졌다. 플로이드 살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체제가 낳은 질환. 특히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위기가 인종차별과 중첩돼 피와 오물을 쏟는 것이다. 평화적 설득과 선거만으로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흑인 평등권 운동의 온건한 지도자였던 킹 목사도 이렇게 주장했다. “자유는 억압받는 사람들 자신이 정취해야 하는 것이다! … 도시 전체를 떠나는 총파업을 벌여야 합니다.” 이런 설매칠 후킹 목사는 살해당했다.

“평화적” 방식으로는 최소한의 지극히 당면한 요구조차 정취하기 힘들 수 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많은 영감을 줬지만,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2014년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살해한 경찰관은 5년 후인 2019년에야 파면됐다. 미네아폴리스 시위 참가자 토드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꼴을 보세요, 미국에서

흑인과 갈색 인종 사람들을 위한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진정한 변화를 정취하려면, 체제 자체를 타격할 수 있는 노동계급 고유의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

미국 노동계급에게는 그런 투쟁의 역사가 있다. 이번 항의 운동의 진원지인 미네아폴리스는 1930년대 미국 노동자들의 전투적 파업의 시발점 중 하나였다. 그리고 1930년대 미국 노동자들은 인종을 불문하고 단결해, 세계적 반동의 시기에도 흑백 차등임금 철폐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혁명가들과 극좌파들이 이 투쟁들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온라인 기사 ‘뉴딜과 1930년대 미국 노동운동의 교훈’ 참조)

체제의 위기 자체를 배경으로 벌어진 이번 거리 시위에는 그런 길로 나아갈 잠재력이 있다. 이번이리트럼프를 비롯한 진정한 “악탈범”들이 크게 한 바 먹이기를 기대하며, 한국에 사는 우리도 이 저항에 한껏 연대를 표하자.

이 기사는 6월 2일에 온라인으로 발행한 ‘들불처럼 번지는 미국의 흑인 사망 항의 운동’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함께 참가합니다!

미국 흑인 사망 항의 운동 연대 미국 정부 규탄 미대사관 앞 긴급 기자회견
일시: 6월 5일(목) 오전 11시
장소: 미대사관 앞

미국의 인종차별과 혁명

유리 프라스트

미국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것에 대한 분노가 미국 전역에 들끓자 논평가들은 시위대에게 거리 시위를 멈추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미국 흑인 지식인인 한 명인 코넬 웨스트는 CNN에 출연해 그런 방법들을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 체제는 스스로 개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흑인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 봤습니까?” 그리고 왜 흑인 간 빈부 격차가 심지어 더 빨리 벌어지는가?

이런 물음들은 흑인을 공직에 진출시키는 것이 가장 차별받는 자들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에 깊은 균열을 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폭폭하고, 매력적 인 오바마조차 미국의 인종차별적인 본질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은 인종차별의 원인이 사회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의 피루색이 아니라 좀더 체계적인 데에 있다는 증거 아닐까?

이점을 이미 잘 이해한 흑인 급진주의자 맬컴 엑스는 1964년 이렇게 지적했다. “인종차별 없는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틴 루서 킹은 1967년에 이렇게 주장했다.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 군사주의 란 병폐들이 서로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나머지를 그대로 둔 채 중 하나만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종차별은 자본주의에 깊숙히 뿌리박힌 문제이고, 개혁과 더 나은 교육으로 제거 가능한 일발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본연 지배 전략에 의존해 존속하기 때문이다. 맬컴 엑스와 마틴 루서 킹 모두가 이 점을 잘 이해한 것이다.

탄압

흑인을 고위직으로 선출하는 전략은 투쟁의 보조물로 출발했다. 그러나 전투적이었던 1960년대가 가고 탄압과 후퇴의 1970년대가 오자 이 전략은 더 중요해졌다.

1969년 3월 미국 전역에 걸쳐 흑인 남성 994명과 흑인 여성 131명이 공직에 진출했다. 1975년 3월이 되자 그 수 3배로 늘어나 흑인 남성 2969명, 흑인 여성 540명이 공직에 진출했다.

고위직에 진출한 흑인 수가 급증하자 거리 운동은 점점 축소됐다. 이제 사람들은 무언가가 해결되길 바랄 때 스스로의 시위나 운동 조직의 힘에 기대지 않고 흑인 시장, 흑인 상원의원, 흑인 하원의원을 찾았다.

주류화 전략이 낳은 또 다른 효과는 흑인 중간계급이 증가한 것이다. 흑인들이 고위직에 진출했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잡지력이 있다. 이번이리트럼프를 비롯한 진정한 “악탈범”들이 크게 한 바 먹이기를 기대하며, 한국에 사는 우리도 이 저항에 한껏 연대를 표하자.

이제 그들은 다국적기업 이사가 되기도 하고 부유한 백인들이 모여 살던 동네에 살 수도 있게 됐다. 이 전략은 2008년 Barack Obama의 당선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불과 150여 년 전만 해도 오바마를 노예로 취급해 사슬에 묶어둘 수도 있었던 나라에서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것은 실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기대가 하늘을 찔렀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희망”과 “변화”라는 오바마의 구호가 그런 기대를 부추겼다. 주류 논평가들은 이제 미국이 ‘탈인종 사회’가 됐다고 떠들어 왔다. 그러나 그

런 환상에 금이 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수많은 가난한 흑인들은 이렇게 몰았다. 대통령이 흑인이고, 법무장관이 흑인이고, 흑인 경찰장들도 있는데 왜 아직도 비무장한 흑인을 죽인 경찰관을 살인죄로 기소하지 못하는가?

왜 흑인 미국인들은 백인 미국인보다 수감되는 비율이 6배나 높은가? 왜 흑인 남성은 전과가 없어도 고용될 확률이 백인 남성 전과자와 비슷한가?

대체 왜 흑인과 백인의 빈부 격차는 벌어지거나 아니라 좀더 체계적인 데에 있다는 증거 아닐까?

이점을 이미 잘 이해한 흑인 급진주의자 맬컴 엑스는 1964년 이렇게 지적했다. “인종차별 없는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틴 루서 킹은 1967년에 이렇게 주장했다.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 군사주의 란 병폐들이 서로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나머지를 그대로 둔 채 중 하나만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종차별은 자본주의에 깊숙히 뿌리박힌 문제이고, 개혁과 더 나은 교육으로 제거 가능한 일발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본연 지배 전략에 의존해 존속하기 때문이다. 맬컴 엑스와 마틴 루서 킹 모두가 이 점을 잘 이해한 것이다.

이점을 이미 잘 이해한 흑인 급진주의자 맬컴 엑스는 1964년 이렇게 지적했다. “인종차별 없는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틴 루서 킹은 1967년에 이렇게 주장했다.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 군사주의 란 병폐들이 서로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나머지를 그대로 둔 채 중 하나만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종차별은 자본주의에 깊숙히 뿌리박힌 문제이고, 개혁과 더 나은 교육으로 제거 가능한 일발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본연 지배 전략에 의존해 존속하기 때문이다. 맬컴 엑스와 마틴 루서 킹 모두가 이 점을 잘 이해한 것이다.

이점을 이미 잘 이해한 흑인 급진주의자 맬컴 엑스는 1964년 이렇게 지적했다. “인종차별 없는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틴 루서 킹은 1967년에 이렇게 주장했다.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 군사주의 란 병폐들이 서로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나머지를 그대로 둔 채 중 하나만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점을 이미 잘 이해한 흑인 급진주의자 맬컴 엑스는 1964년 이렇게 지적했다. “인종차별 없는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틴 루서 킹은 1967년에 이렇게 주장했다.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 군사주의 란 병폐들이 서로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나머지를 그대로 둔 채 중 하나만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점을 이미 잘 이해한 흑인 급진주의자 맬컴 엑스는 1964년 이렇게 지적했다. “인종차별 없는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틴 루서 킹은 1967년에 이렇게 주장했다.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 군사주의 란 병폐들이 서로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나머지를 그대로 둔 채 중 하나만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점을 이미 잘 이해한 흑인 급진주의자 맬컴 엑스는 1964년 이렇게 지적했다. “인종차별 없는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틴 루서 킹은 1967년에 이렇게 주장했다.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 군사주의 란 병폐들이 서로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나머지를 그대로 둔 채 중 하나만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점을 이미 잘 이해한 흑인 급진주의자 맬컴 엑스는 1964년 이렇게 지적했다. “인종차별 없는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틴 루서 킹은 1967년에 이렇게 주장했다.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 군사주의 란 병폐들이 서로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나머지를 그대로 둔 채 중 하나만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권당이 윤미향 변호에 앞장서고 있다

진영논리와 윤미향·정의연 변호론 ①

윤미향 변호의 진정한 대상은 문재인 정부

김문성

6월 2일 미래통합당 여성 의원들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몇 년 전 같았으면 한일위안부합의를 찬성하고 이에 반대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난했을 우파 정치인들이 할머니를 감싸고 나선 것이다.

반면, 30년 위안부 운동에 헌신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그 친구들은 이용수 할머니의 대척점에 서 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과 진보진영 온건파들은 원색적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이쯤만 대면 알 만한 진보 인사들도 이용수 할머니를 비난하는 가짜 뉴스를 인용한다. 그들은 우파의 위선적 공세가 위안부 운동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윤미향 의원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 방어가 먼저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물론 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 그들의 본심은 이 말에 담긴 듯하다. “이번 사안은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윤 전 정의연 이사장 개인의 비리 의혹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비판해 마지 않았던 한일위안부 합의 문제는 그들에게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 그저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 등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이 힘 겨루기

를 하는 상황에서 여당을 흡집 내는 데 이 쟁점을 이용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눈덩이처럼 커진 회계 부정·부실 의혹이 덮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의혹들은 윤미향 의원의 개인적 자질이나 도덕성 문제로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 공개 모금을 개인 계좌로 하고도 “총수입과 총지출이 맞았다”는 식으로만 해명한 것이 오히려 이 운동의 재정 운영에 의혹을 갖게 한다. 운동을 조직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을 어디에서 구하고(출처), 어디에 쓰는지(용처)는 단지 회계 미숙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그래서 위선적 우파뿐 아니라 무엇보다 진보 염원 대중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개 모금을 하고 국민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회계 부정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태도다.

게다가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미향 변호론자들도 우파와 마찬가지로 정작 이 문제를 존재하지 않는 양 취급한다.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왜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씨가 민주당 의원이 되는 것을 곧 문제 해결 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을까? 여기

에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정대협 논란의 진정한 배경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비밀리에 했던 한일 위안부합의는 문제투성이인 데다 특히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라고 못 박아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끝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반동적인 합의였다. 문재인은 야당 대표로서 이 합의를 비판했고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자체 보고서에서 합의 과정의 문제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2018년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공표했다.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뿐만인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 노력도 방해했다. 할머니들은 2016년 3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합의가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 판결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외교부)는 2018년 6월 이 헌법소원을 각하해 달라는 정부 의견서를 한재에 비공개로 제출했다.

미·중 간 제국주의적 갈등이 고조되고 미국이 한·미·일 간 결속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기로 한 것

이다.

일본 아베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일 위안부합의가 국가간 합의이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는 것이다. 아베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 인정, 공식 사과와 진상 규명, 배상 등)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더욱 강하게 고수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 것은 단지 해결 노력이 지체되는 정도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운동이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문재인 성역화(?)

그런데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그리고 그들을 감싸는 개혁주의적 엔지오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기만과 배신을 규탄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본 정부를 규탄할 명분도 약해진다. 즉, 정의연(과 여성 엔지오, 인권 엔지오 등과 좌파적 민족주의 정치 단체들이 함께한) 운동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태도 때문에 발목이 잡혔고 그 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따라서 이용수 할머니뿐 아니라 세상물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라면, 윤미향 씨가 민주당 의원이 된 것은 더는 이 운동을 진척시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길 법하다. 실제로 윤미향 의원은 총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홍보물에

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앞세우거나 강조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한일 의원모임을 주도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운동이 처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실효성이 없는 헛된 약속일 뿐이다.

민주당과 윤미향 의원 본인과 정의연, 지도적 엔지오들, 좌파적 민족주의 정치 단체들이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에 담긴 합리적 핵심을 외면하고 이분법적 진영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운동이 빠져 있는 이 밋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말해, 진영논리를 동원한 윤미향 변호의 진정한 대상은 문재인 정부인 것이다. 이전의 성과까지 훼손하면 안 된다는 말은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실질적인 점들이 토론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위선에 계속 침묵한다면 진보 진영이 내로남불한다는 우파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문재인은 5월 28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 자리에서도 위안부 합의 추진의 과정만 비판했지 그 내용은 비판하지 않았다(정부 수반의 위치에서 책임성 없게도).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 당시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 내용]을 공유했으면 이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으나 일방적이었다.”

마녀사냥론은 허구다

윤미향 변호론의 주된 레퍼토리는 비판자들이 부차적인 실수들을 엄청 대단한 의혹처럼 부풀려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마치 윤미향 의원이나 정의연이 힘 없는 약자나 소수자인 듯한 가정이 전제돼 있다.

그러나 한때 대통령도 넘봤던 현대 중공업 재벌의 총수 정몽준과 부유층 장로들과 담임목사가 지배하는 메가 처치(초대형교회) 명성교회조차 십수억 원씩 돈을 대고, 정부 보조금을 매년 수억 원씩 받는 단체, 그 악독한 박근혜 정부조차 최종합의 전에 한일위안부합의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전화할 정도의 정치적 위상을 가진 윤미향 씨와 정의연이 마치 약자로서, 강자들의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당 실세 대표(이해찬)가 지금 이순간 앞장서 윤미향 의원을 감싸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언론사들(방송, 신문 포함) 중에서도 민주당에 우호적인 곳에서는 윤미향 씨를 감싸는 보도들을 해 준다. 또한 한일위안부합의에 고위 정부 관료들이 연루된 외교부도 수차례 윤미향 의원에게 유리한 해명을 해 줬다. 며칠 전에는 윤미향 의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2015년 면담 자료를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무엇보다 윤미향 의원 자신이 이제 집권당 국회의원이다. 그가 과거에 어떤 실적을 했든 이제 그는 국가기관의 하나인 것이다.



2018년 1월 “위안부 합의 재협상 없다.” 밝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윤 의원이 비판받는 이유가 천대받는 소수자 정체성이나 좌파 사상 때문도 아니다. 대중이 제기하는 것은 범국민적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얻은 혜택과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문제이다. 정작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정의연을 떠났으니 운동의 전망을 자신에게 묻지 말라고 했다.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다.

권력자들이 강력하게 이분법적 진영논리를 유포시키는 것은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현 운동의 방식을 성찰하자는 진정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마치 없는 ‘존재’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권당의 변호가 먹히는 것은 ‘우파 위협론’이 현실 세력관계에 비춰 매우 과장돼 있다는 반증도 된다.

사실 여권 차원의 옹호와 동원이 없

다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자행될 수 있겠는가? 드루킹 공작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다행히 윤미향 의원 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우파의 마녀사냥이 먹힌 게 아니다. 윤 의원과 정의연의 해명이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증도, 논리도, 태도도 (음모론에 탐닉하는 골수지지층을 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감만 일으켰다. 그리고 진정으로 마녀사냥을 자행하는 것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윤미향·정의연 변호론자들이고, 이 마녀사냥이 먹히지 않는 것은 이용수 할머니가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할머니야말로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성역화가 문제라고?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난데없이 “피해자 성역화”를 비판하면서 이를 변호 논리로 꺼내드는 것도 우습다.

과연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와 회한에 담긴 간절한 바람에 주목하는 것이 문제인가? 오히려 문제는 여권 핵심 지지층과 진보진영의 일부 지각 없는 인사들이 음모론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가짜뉴스(할머니의 기자회견에公安검사 출신 통합당 의원 광상도가 참가했다는 등,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 장교와 영혼결혼식을 올렸다는 등)까지 버젓이 동원해 가며 이용수 할머니를 인신공격 하는 것 아닌가?

할머니의 비판에 담긴 합리적 핵심에 주목하는 쪽이 너무 적은 것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최근 비난 공세야말로 일본의 우익들을 기쁘게 할 일 아닌가? 집권당의 고위 정치인 중에 자기 지지층에게 할머니 인신공격을 중단하라고 호소하는 인물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

그래서 이 부정직하기 짝이 없는 프레임 조작을 걷어내고 보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여권, 그리고 진보계 일부가 위안부 운동 지도자들이 정부와 유착해서 생긴 위기를 감추고 (위안부 문제에서) 문제인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으려고 피해 당사자를 집단왕따시키는 것이다. 이미 윤미향 씨 등은 정대협의 기초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은 피해자라서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유로 서울 중구 남산 ‘기억의 터’ 기념비에 새긴 위안부 명단에서 심미자 할머니, 박복순 할머니 등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자주성

진보 언론과 중에서는 본지만이 운동의 전략과 전방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정의당은 비교적 일찍 심상정 대표가 직접 윤미향 의혹을 비판했다. 아쉬운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빚어진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위기에 관해서는 말을 아낀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의당 전 사무총장 신장식 씨는 MBC 100분 토론에 나가 이용

수 할머니에 대한 공격으로 악명 높은 더불어민주당 간부 최민희 씨와 편을 이뤘 윤미향 씨 옹호 패널로 활약했다.

민중당은 일관되게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왔다. 다만 최근 이 당의 선임 당원 중 한 명인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이 개인적으로 당론과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 약속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자는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선거용 위성정당에 입당하였다.” 이의엽 소장은 정부·재벌·초대형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자주적 운동일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 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할시다.

진영논리와 윤미향·정의연 변호론 ②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이
시민운동을 위기에 빠뜨리는가

김승주

주요 시민단체 리더들은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과 그로 인한 논란이 시민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윤미향·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변호론을 편다. [정의연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1990~2016년)의 후신으로, 정의연과 정대협은 사실상 같은 단체다. 이하에서는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시기상 정대협인 경우도 정의연으로 통일했다.] 일본·한국 정부와 국회가 저야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미해결 책임을 시민단체에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5월 14일 시민단체 330여 곳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렇게 말했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은 크게 왜곡된 것이어서 시민단체와 활동가에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악의에 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권 운동의 리더로 널리 알려진 박래군 씨가 이런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이용수 할머니를 직접 겨냥했다. “이용수 씨는 정의연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할머니를 팔았다, 이용당했다’는 기자회견을 두 차례나 했다. 극우세력들이 ‘위안부’ 운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그렇게 이 여성 인권 평화운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박래군 씨는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이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이용수 씨도 자신이 인권 활동가임을 자각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도 함께 논길 수 있어야 한다. 정의연 운동을 개설했던 위안부 지우기에 열심이었던 우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인 데다 악의적인 해석이다.”

왼쪽에도 있다

박래군 씨는 특히 이용수 할머니가 “정대협에 이용만 당했다”고 한 말이 우파에게 빌미가 됐다고 보는 듯하다. 우파들은 정의연이 “피해자 비즈니스”를 해 왔다고 비난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돈벌이가 끝일까 봐 막았다는 것이다. 위안부 지우기에 열심이었던 우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인 데다 악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회계 관리 부실뿐 아니라 재정 출처와 용처가 모두 의혹의 대상이 됐고, 윤미향 씨의 해명이 부실하고 심지어 오만하기까지 해 위안부 운동 지지자들을 납득시키는 데에 실패한 상황에서 우파의 비난만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에 하나 우파의 악의적인 ‘피해자 비즈니스’론이 사람들에게서 반향을 얻는다면, 그것은 윤미향 씨 등 정의연 리더들이 반성을 회피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윤미향 씨와 정의연을 변호하는 사

람들이 ‘나눔의 집’(조계종 산하 위안부 쉼터)은 ‘그럴 줄 알았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내로 남불’이다. 문제를 알면서도 덮어 주는 것은 운동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지지자들의 환멸을 부르는 한편, 우파의 비난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다.

윤미향·정의연을 비판하면 다 한 통속이라고 보는 것은 비약이다. 시민단체 지도자들은 앞으로 우파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정부가 악법을 통과시켜도 정부 비판을 삼갈 것인가? 어느 방향에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비판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은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하나라도 더 살아 있을 때 위안부 문제의 원칙적 해결(일본 국가 자체의 사죄와 배상)을 이루자는 것이다.

특히, 정의연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왼쪽으로부터도 나왔다. 초기부터 문제를 지적해 온 본지가 그런 비판자다. 본지의 비판의 기본적 관점은 철저하고 일관된 반(反)제국주의다. 친일 세력의 공세 운운하는 쟁점 돌리기가 통할 여지가 없다. 이런 사실을 박래군 씨 등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모른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진영논리는 그저 좌파의 비판은 존재하지 않는 양 농치고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운동의 모순

무엇보다 박래군 씨 변호의 핵심 난점은 이용수 할머니에게 윤미향·정의연 부정 의혹 확산의 책임을 돌리면서, 엔지오 운동 일반에 구조적으로 내재돼 온 모순을 가린다는 것이다.

정의연의 위기는 이용수 할머니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 내부에서 끓아 있던 문제를 바깥으로 드러냈을 뿐이다. 더욱이 핵심 의혹 대상인 회계 부정 의혹은 이용수 할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었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지하고 대변한다는 이유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정의연을 여러 차례 접촉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온전하게는 아닐지라도) 사전에 공유하고 피해자들을 설득하려 한 사실은 정대협의 위상을 가늠케 한다.

이 과정에서 단체 대표자의 명망도 올라갔다. 윤미향 씨의 국회 입성은 그 덕분이었다. 그리고 정의연은 정부나 기업한테서 수십억 원의 지원을 받는 대형 엔지오로 성장했다.

그러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외면할 때 정의연은 비판을 삼갔다. 심지어 윤미향 씨는 위안부 운동 단체의 대표라는 걸 내세워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그리고 정의연의 높아진 위상과 거액의 후원금은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하며 투쟁하는 데 쓰이지 않았



“새 대통령(문재인)은 사드도 막고 위안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2017년 5월 3일 성주 소성리 사드 반대 집회에서 연설한 이용수 할머니

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살아생전 일본 국가의 책임 인정·배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도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피해자들이 모자람 없는 여생을 보내는 데 쓰이지도 않았다. 정의연의 재정은 주로 모금 홍보 활동과 “기억” 활동(기념비 세우기, 김복동 센터 짓기 등)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로 쓰였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가면서 대표자 및 상근 활동가와 위안부 피해 당사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커진 듯하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상대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와도 싸워야 할 단체가 점점 더 민주당과 밀착하고 심지어 기업에 후원을 요구하는 등 주류화되는 과정이 동반됐다. 현 사태를 낳은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

엔지오 운동의 목표는 정부 바깥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 힘으로 국가 개혁을 견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끌고 정치인과 국가 관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망 있는 대표자가 중요해지고 단체의 위상도 그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엔지오는 연구·교육 등 전문가적 업무를 중시하기 때문에 상근자 집단이 평회원·지지자들에 대해 대행(대리)주의적이 되기 쉽고 후자를 수동적인 채로 놔두기 쉽다.

시민단체 지도자 출신으로 부통령급이라는 서울시장을 9년째 하고 있는 박원순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 말만큼 귀에 따갑게 자주 들어본 말은 없다”(《한국의 시민운동-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2002).

엔지오 운동의 이런 대리주의 문제는 보편적이다. 대리주의는 지지자들에게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다. 능동적 행위주체는 대표자와 활동가뿐이고, 평회원 등 보통의 지지자들은 수동적 존재로 방치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엔지오도 ‘비정치적’ 개혁 운

동을 표방했지만 결국 자신의 정책 제안에 호의적인 정당(주로 민주당)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 게다가 많은 임원들이 민주당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민변 출신이고 조국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윤미향 변호에 앞장선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번에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이 됐다)은 각각 한국의 대표적 여성단체들인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민우회 대표 출신이다.

‘시민’ 사회는 결코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지대가 아닌 것이다. 이번 윤미향·정의연 논란에서도 시민단체 대표자들 다수가 여당 편에 서서 장단을 맞추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보수성과 엘리트주의

박래군 씨도 뜨거운 정치 현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배신적인 입장을 취할 때 정면으로 비판하기를 삼갔다. 416연대 공동대표였던 지난해, 24만 명이 참여한 “세월호 특별수사” 청와대 청원을 문재인 정부가 단칼에 거부하자 416연대 평회원들 사이에서 정부와 416연대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사발통문’ 캠페인이라는 방식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박래군 대표는 “혼란을 조성한다며 ‘416연대를 궁지로 모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보수적이면서도 실상 정부를 감싸는 입장을 내놓았을 일이었다.

박래군 씨는 이번 윤미향·정의연 사태에서도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을 비판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운동의 자기정화를 위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기업에 대한 견제를 표방하면서도 정부와 기업의 돈줄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적나라한 모순이다. 박래군 씨가 소장하고 있는 인권재

단 ‘사람’도 한 사례다. 이 단체는 구급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차별, 인종차별 등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던 바로 그 해에 구급한테서 후원금을 받았다. 구급의 후원금은 이미지 세탁용(핑크머니)인 게 뻔했는 데도 말이다.

요컨대, 지금의 위기는 개혁주의적 엔지오 리더들이 회전문처럼 민주당 정부에 들어갔다 퇴임 후 다시 엔지오로 돌아오기와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의 정제, 피해 당사자 및 지지자들의 정당한 이익의 제기를 외면하는 그 리더들의 엘리트주의와 보수주의로 인한 위기다.

따라서 표준회계 기준을 만들고 시민단체의 회계 정리를 지원하는 방안(어쩌면 정부의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을 마련하자는 박래군 씨의 대안도 피상적이다. 회계 미숙은 기껏해야 매우 부차적인 쟁점이다. 회계 관리의 부실과 무책임성도 엘리트주의와 보수주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된다.

박래군 씨는 “아무 관련도 없는 시민사회단체까지 유탄을 맞”을까 봐 우려한다. 이번 사태로 후원금이 줄고 정부(국세청)의 감독 권한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엔지오 중에는 실제로 투명하게 회계 관리를 하는 엔지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영논리와 이중잣대로 부정 의혹을 감싸는 언행은 운동의 신용을 추락시켜 오히려 국가의 간섭을 정당화한다.

그런 태도는 진보적인 대중에게는 환멸을 주고, 우파들에게는 비난의 빌미를,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약속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여당에게는 면죄부를 줄 뿐이다.

돈은 정치다. 엔지오들이 보통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려면 이들로부터 받은 돈에만 의존하고, 정부와 기업과는 일절 단절해야 한다.

영화평 〈안녕, 미누〉

미누의 삶으로 보는 많은 이주노동자의 애환과 투쟁

임준형

18년간 한국에 살며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맞서 활동했던 네팔 이주노동자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 씨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미누〉가 5월 27일 개봉했다.

미누 씨는 1992년 21살의 나이로 한국에 왔다. 아직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제도조차 없던 때였다. 처음부터 미등록 체류를 각오하고 ‘15일짜리 비자로 한국에 와 식당, 봉제공장 등 한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했다. 지금도 전체 이주민의 18퍼센트인 39만 명이 미등록자이고, 그중 약 29만 명은 미누 씨처럼 처음부터 미등록 체류하며 일할 생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10년 넘게 한국인 동료들과 ‘이모’, ‘형·동생’ 하며 살던 어느 날, 미누 씨는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뉴스로 접한다. “나 잡으라는 거네? 이게 뭐지?” 어느새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미누 씨는 보이지 않던 국경을 깨닫고 당혹한다.

미누 씨의 삶을 바꿔놓은 이 사건은 2003년 7월 고용허가제 국회 통과를 전후 해 당시 노무현 정부가 벌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이었다.

미누 씨가 한국에 온 이듬해부터 한국 정부는 산업연수제를 도입해 이주노동자 유입을 관리·통제했다. 이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로 악명을 떨쳤다.

이주노동자들의 항의 시위 등 산업연수제 폐지 요구가 계속되자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역시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단기적으로 공급한다는 전제 위에 설계됐다. 그래서 작업장 이동 금지, 정주화를 막기 위한 체류 기간 제한 등 산업연수제의 문제점들은 그대로였다.



살인적인 단속 추방이 이어졌다.(고용허가제 국회 통과 당시 이주노동자의 78퍼센트가 미등록 상태였다.) 오랫동안 미등록 체류하며 한국에 적응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작업장 변경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머무른다면 고용허가제 안착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미누 씨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380일 농성

이주노동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무려 380일 동안 지속된 명동성당 농성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농성을 벌이며 저항했다. 미누 씨는 성공회대성당 농성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미누 씨는 이주노동자 권리에 눈을 뜬다. 영화 속에서 미누 씨는 개인적인 해결책을 찾을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스탑! 스톱! 스톱! 크랙다운! (단속 추방 중단하라)” 음악에 재능이 있던 미누 씨는 한국어에 서툰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호를 노래로 만든다. 이 노래는 지금도 이주노동자 집회에서 즐겨 불리고 있다.

미누 씨는 이 일을 계기로 농성장에서 결성된 다국적 밴드 ‘스탑크랙다운’



2006년 노동자연대(당시 다함께)가 주최한 포럼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서 ‘스탑크랙다운’ 노래를 부르는 미누 씨

의 보컬을 맡게 된다. 이후 미누 씨와 ‘스탑크랙다운’ 밴드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과 축제의 장이면 어디서든 볼 수 있었다. 메이데이,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 한미FTA 반대 집회,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서도 공연하며 한국 운동에 연대했다.

또한 미누 씨는 다문화 강사, 이주노동자 방송국 MWTV의 대표 등으로 이주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알리기 위

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정당한 활동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2009년 미누 씨를 표적 단속해 강제 추방했다. 인생의 거의 절반을 보낸 곳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쫓겨난 미누 씨는 노동과 투쟁으로 한국에 기여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미등록 단속으로 추방된 후 통상 5년이 지나면 입국이 허용된다. 그런

데 미누 씨는 8년이 지난 2017년 4월에도 입국이 거부된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것이다.

영화는 실의에 빠진 미누 씨를 위로하기 위해 밴드 멤버들이 네팔 현지로 날아가 공연하는 과정을 그린다. 2018년 1월, 밴드는 무려 9년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선다. 이주노동자를 상징하는 빨간 목장갑을 낀 미누 씨의 주먹이 다시 허공을 가른다. 공연이 끝난 후 “이제 죽어도 좋아”라던 그의 말은 그가 한국에서의 삶과 투쟁에 얼마나 큰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드러낸다.

그해 9월에는 미누 씨의 DMZ국제다큐영화제 참석이 허용돼 잠시 한국을 방문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다만, 2박 3일 동안 영화제 장소 내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박근혜퇴진 촛불운동이 정권을 바꿨지만 바뀐 정권이 허용하는 변화는 딱 그만큼이었던 것이다.

“나를 불쌍하게 그리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미누 씨는 2018년 10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46세. 한국 방문 후 한 달 만이었다.

미누 씨는 영화 감독에게 “나를 불쌍하게 그리지 마세요”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의 말처럼 이주민들은 내국인들과 동등한 주체로서 연대하고 투쟁할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진정한 정서적 유대는 국적이 아니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함께 투쟁한 경험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그의 삶은 보여 준다.

우리는 여전히 39만 명의 ‘미누’와 함께 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미등록 이주민 2명이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했고,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인종차별에 맞서고, 영화 제목의 ‘안녕’이 ‘굿바이’가 아니라 ‘헬로’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안녕, 미누〉를 추천한다.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이현주

6월 2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무급휴직 상태이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명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부는 이 결정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내 전체 한국인 노동자에게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0억 원 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한국인 노동자들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일터로 복귀하라”고 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다 협상이 지연되자 지난 4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4000명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아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다.

생계 위기에 봉착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4·15 총선이 다가오자,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별개로 한국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이 제안을 무시했다. 그러다 이번에 그 제안

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정부는 한국더러 안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라고 강하게 요구해 왔다. 자신들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는 뻔뻔하게도 한국더러 돈을 많이 안 낸다고 불평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애먼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끊어 버리자 많은 한국인이 분노했다.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던 조처는 거둬들였지만, 협상의 요구 자체를 거둬들인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6월 2일 발표문에서도 방위비분담금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월급이 끊겨 생계가 막막했을 많은 노동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은 이번 조처를 환영하면서도, “두 번 다시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협상 때 근로자 무

급휴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미 간 협상 때마다 생계가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게 직접고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방안을 계속 외면해 왔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다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고용 방안은 합리적이다. 한미 간의 이번 합의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하라

5월 27일 현대중공업 사측은 연이은 산재 사고에 적극 항의해 온 활동가인 김경택 대의원을 징계했다. 김경택 대의원이 사측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했다며 “견책 조치”를 통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이 시말서를 쓰지 않으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했다.

김경택 대의원은 얼마 전 사측이 산재를 당해 입원했다가 숨진 동료 노동자의 병원비 수천만 원을 유가족에게 떠넘겼다고 SNS에서 폭로했다. 이 일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결국 사측은 뒤늦게 병원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사측이 이 폭로가 유언비어라며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표적 징계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을 눈엣가시로 여겼을 것이다. 김경택 대의원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적극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위험 작업이 진행되면 그냥 넘기지 않고 사측에 항의하거나 노조에 알려 작업중지를 시키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산재 사고 당시에는 사측이 작업 문서를 위조한 것을 적발해 재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막았다.

또, 그는 이런 산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활동가들을 규합하고 기층의 운동을 강화하려고 애쓴 활동가 중 하나다.

김경택 대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회사는 제가 [폭로한 사건의] 증거가 없는 줄 알고 징계를 때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증이 나오자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징계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작성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이번 징계는 단지 저 혼자 문제가 아닙니다. 당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은 동료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히 회사는 이번 징계로 현장을 위축시키려고 할 겁니다.”

김경택 대의원 지적처럼, 사측의 이번 표적 징계는 현장 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현장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도 위축시키려 할 것이다.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징계 철회와 예고된 중징계 추진에 반대해 항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6월 2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노보에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징계 사실을 알리며 사측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의 적극적인 방어가 중요하다. 기층의 활동가들도 현장 조합원들의 항의를 모아 내 사측을 압박해야 한다.

김지태

정규직 전환 희망 고문 9달째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는 보라매병원 노동자들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멈췄던 정규직화 투쟁을 재개했다. 5월 25일 노동자들은 병원 앞에 천막을 설치했고, 지난해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공동투쟁에 함께했다.

이 투쟁의 성과로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 명은 지난해 1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에도 합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 사측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운영을 맡은 서울대병원 사측과 소유주인 서울시가 이를 방지하면서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홉 달 가까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보라매 병원 사측은 파견용역직 노동자

248명 중에 콜센터 노동자 27명, 장례식장 노동자 8명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시간만 끌어 왔다. 콜센터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환할 테고 장례식장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서 외주업체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사측의 이유다.

돈벌이 우선하는 공공병원

그러나 두 업무는 병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외주화하면 결국 환자·보호자들에게 불편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병원은 인건비를 아껴 돈을 남길지 몰라도 말이다.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면, 해당 업체의 이윤을 위해 비용이 오르거나 서비스질이 악화한다. 결국 보라매병원 사측은 필수 공공서비스보다 돈벌이를 우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이 수익성을 우선한 운

영을 하는데도 이를 나몰라라 하며, 노사합의로 처리하라고 수수방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앞뒤가 안 맞는다.

노동자들은 올해 초까지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유지해 오다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잠시 투쟁을 미뤄 왔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임명된 현 김병기 병원장의 임기가 5월까지라, 새 병원장 하에서 합의가 이행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최근 김병기 병원장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와 서울대병원, 서울시는 자기가 언제 정규직화 약속을 했다는 듯이 모르는 체하고 있지만,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는 정규직화 합의 이행하라.

장호중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6월 1일 STX조선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사측이 6월 1일로 끝나는 순환 무급휴직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해 노동자들이 반발한 것이다.

2년 전 STX조선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규모 감원에 맞서 파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 체결한 합의로 노동자들은 감원은 하지 않지만 대폭의 임금 삭감과 6개월씩 순환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 노조 지도부는 별도로 사측과 순환 무급휴직 기간을 2년으로 합의했다며, 적어도 유급휴직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무급휴직 합의를 “고용친화적 구조조정”이라며 치켜세웠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됐다.

사내 복지 제도가 사라졌고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임금이 70퍼센트 이상 깎였습니다. 1년에 절반은 무급휴직하고, 수당 같은 것도 다 깎였습니다. 회사는 최저시급도 안 지킵니다. 정부에 걸려 봐야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급휴직 기간에 노동자들은 톱 서비스, 건설 일용직 등으로 내몰리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이 같은 조건 악화 속에 퇴사하는 노동자도 많았다. 그 영향으로 조합원 수도 2년 전 합의 당시 780명에서 현재 515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렇게 정규직이 줄어드는 동안 사측은 비정규직을 고용해 조선소를 가동했다. “고용친화적” 구조조정이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책임 떠넘기는 정부와 사측

무급휴직 기간 연장은 이런 고통을 더 감내하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2년 동안 우리는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도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정부와 사측은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조선업 위기가 커지자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더욱 전가하려 한다. STX조선은 올해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사측은 사무직 유급휴직과 ‘희망퇴직’ 실시도 예고했다.

이처럼 STX조선의 구조조정 상황은 경제 위기 시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을 양보해 일자리를 지키자는 주장이 실제로는 일자리를 지키는 대안조차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운운하며 일자리 50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놔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 대부분은 저질 단기 일자리들이다. 정부는 오히려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 삭감을 추진하려고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자들은 문재인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 책임이 없다. 노동자들을 즉각 일터로 복귀시키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위기에 처한 기업을 영구 국유화해 정부가 운영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김지태